



# 부산지역 에너지특화를 위한 전략적 정책방향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박 수 역)박사



▲우리나라의 제2의 도시인 부산광역시의 급선무는 교통문제의 해결이다. 교통문제와 함께 도시공간의 재배치·쓰레기 재활용·신재생 에너지이용확대 등이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즉 지역특성에 적합한 수요관리 최적방안 일 것이다. 이러한 과제의 해결을 위한 관계된 산·학·연·정 전문가들의 모임인 지역모임으로 부산지역에너지개발 포럼의 구성과 함께 최근 부산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행사를 가졌다.

부산은 우리나라의 97년 최종에너지 소비량 14억4천4백83만 TOE(석유환산톤)의 약5%인 7백24만8천TOE를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에너지소비증가율은 전국(9.7% 증가)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1.3%가 오히려 감소했으며 1인당 에너지소비도 전국의 3.1TOE에 비해 낮은 1.88TOE를, 1인당 전력소비량은 2천9백63KWh로

전국의 4천2백83KWh로 대체로 낮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부산의 에너지소비 증가율의 큰 특징으로 전국이 고른 증감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부산은 연도에 따른 에너지소비 변화가 큰 것에 기인하고 있다.

부문별로는 수송부문이 가장 많은 47.7%인 3백45만9천TOE를 다음으로 가정·상업부문이

28.9%를 공공부문이 1.4%를 소비하고 있다.

이렇듯 부산지역은 전국 규모의 부문별 에너지 소비와 비교해 수송부문의 에너지소비와 비교해 수송부문의 에너지소비점유율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난 반면 산업부문은 전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다.

### 부산 지역에너지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부산의 광역개발 계획은 △항만·공항 등 국제화 기반시설의 정비를 통한 국제기능의 강화 △업무단지 개발을 통한 중추 관리기능의 제고 △나머지 광역권 전역에 대한 공업단지와 첨단 산업단지 개발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산업구조 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의 추진을 위해 부산지역이 지닌 에너지분야 특징과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부산의 지역에너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우선에너지의 안정공급을 위해 천연가스 배관망 구축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기반의 구축과 함께 석유소비 비중의 안정화와 송유관 보급에 따른 공업단지내 석유저장 시설의 확충으로 석유에너지의 안정공급을 이루어야 한다.

수송부문의 에너지이용 효율 향상을 위해 교통과밀 지역에 대한 시범지정으로 혼잡통행세의 추진과 지하철과 버스노선의 연계 수송시스템의 구축 CNG(압축천연가스)자동차 보급과 자전거·보행자등으로 녹색 교통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산업체의 폐열 및 폐기물의 재활용과 지정에너지관리 대상업체 및 에너지다소비 업체의 체계적 관리와 에너지관리 진단 등을 실시해 산업부문 에너지이용 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가정·상업부문은 전력다소비를 유발시킬 수 있는 대형건물의 수효파악과 함께 이를 전기다소비건물로 지정, 지속적인 관리지도하고 신축 공공건물을 에너지절약형으로의 설계, 에너지절약 기자재 보급확대, 에너지절약 시범마을을 육성해야 한다. 태양열의 이용 확대, 하수처리수 폐열의 이용, 일반·산업폐기물의 재활용 등 미활용에너지

에 대한 자원량 분석 및 활용 타당성의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부산 지역에너지 특화를 위한 전략적 정책방향

부산의 지역에너지 사업의 특화를 위해 △에너지이용 효율을 위한 사회기반 구축 △대체 및 미활용에너지의 적극활용 △에너지다소비 분야의 대책방안 마련 △민간협력을 통한 에너지문제 해결 △넘비현상의 구조적 이해와 극복등이 해결되어야 한다.

우선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해 집단에너지시설의 확대와 부산의 기후·에너지이용방식·교통체제 등을 고려한 에너지절약형 도시계획 등 전반적인 기반구축사업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위한 기초적 여건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함께 수송 및 건물에너지 절약을 위한 기반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화석에너지 부존자원의 고갈, 가격의 불확실성, 이산화탄소 배출규제의 강화 등으로 지역단위로 보유하고 있는 대체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이 시급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오늘날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정부와 시민의 협동생산이 강조되고 있으며 민관 공동체제하의 지역에너지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단체와의 호흡을 같이하는 사업개발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에너지관련시설 및 환경 혐오시설의 입지문제에 심한 고통을 앓아오고 있다.

이러한 넘비현상을 극복하기위해 미국은 주로 보상에 의한 방법, 프랑스는 지원제도의 활성화, 영국은 투명정책 전략을, 캐나다 및 일본은 설득에 의한 방법 등을 활용하고 있는 만큼 넘비현상의 구조를 잘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지역공동체의 노력이 절실하며 입지 선택에 따른 충분한 보상을 해주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